

시동 건 국회 개혁입법... 개혁보수신당 가세로 속도 낸다

민주·국민의당 권위주의 청산·경제민주화 등 입법안 마련

전경련 해체·재벌 독점 규제·공수처 신설 통과 시기 주목

한신협 신년 호남권 여론조사 국민주권 강화 등 과제 꼽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 민심에 따라 각 정당들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등 개혁 입법에 본격 나서면서 올해 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중인 개혁 입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민 절반 이상은 권력기관 개혁(30.2%)과 국민주권 강화(25.2%)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과제로 꼽았다. 또한, 정치개혁(17.3%)과 역사 바로 세우기(10.7%), 경제민주화(9.4%) 등도 대한민국 개혁에 필요한 과제로 답했다.

◇각 정당 개혁입법 시동=더민주주의는 최근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심의 명령’을 단기부터 중·장기에 걸친 단계적 개혁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회의 개혁입법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개혁운동으로 승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가 내세운 구체적 개혁 입법안은 권위주의와 부패·정경유착 청산, 시민민주주의 회복 운동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제재강화 ▲전경련 해체 및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정경유착 카르텔 청산 ▲주주대표 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권 만 18세까지 확대 등 시민의 정치적 권리확대 ▲중앙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혁신발전법 제정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대통령·정부 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

등을 위한 입법 개정 및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재벌·검찰·언론개혁, 정치·사회 개혁 등 4대 개혁 입법을 늦어도 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개혁 법안으로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소주주 보호 및 이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법 제정 등이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전관예우 및 물레변론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며, 언론개혁으로는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 있다. 정치·사회개혁 법안으로는 국정교과서 저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있다.

개혁보수신당도 최근 정경·정책 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개혁 입법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만 18세 인화 등의 개혁 입법을 검토중이다.

◇호남민, 권력기관 개혁·국민주권 강화 과제 꼽아=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지역민들은 ‘검찰과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에 각각 35.4%, 31.6%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주권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24.9%, 24.7%였다. 반면

전북지역은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주권 강화’(26.0%)에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 이어 정치개혁(20.3%)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5.1%, 16.0%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는 광주 8.9%, 전남 11.4%였다. 경제민주화를 시급 과제로 꼽은 응답율은 광주가 9.7%, 전남 8.5%, 전북 10.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우선 과제를 보는 시각은 다르게 나타났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19세~29세, 30대, 40대는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국민주권 강화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 53.4%가 정치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권력기관 개혁(36.3%), 국민주권 강화(29.9%)를 우선 순위로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권력기관 개혁(32.7%), 정치개혁(21.7%), 국민주권 강화(21.5%) 순으로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인 광주일보와 전북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광주·전남·전북·제주 각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화면접·스마트폰 앱·자동응답 혼용 무선(85%)·유선(15%) 임의 전화걸기(RDD) 및 스마트폰 알림 혼용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8.0%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불참하며 시무식 앞자리가 비어있다./연합뉴스

이정현 탈당 “모든 책임 안고 가겠다”

나머지 핵심 친박들 버티기...새누리 내분 2라운드

분당 사태와 함께 ‘인명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만 새누리당 내분은 2라운드로 접어들어 형국이다. 이번에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을 향해 탈당을 요구한 ‘인적 청산’을 놓고 새누리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이정현 전 대표가 2일 탈당을 전격 선언했지만 나머지 친박 핵심들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어 인 위원장장이 탈당 시한으로 정한 오는 6일께가 새누리당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계 제출에 앞서 당 지도부에게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

산안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 동석한 홍문종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서 의원은 정리가 되면 안 그래도 당을 떠나고 (탈당의) 방식과 떠나는 날을 본인이 정하려고 했는데, 인 위원장이 너무나 게 안인가 (불만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로 내려가) 2선 후퇴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으면 됐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며 “(탈당할 바에) 차라리 날 죽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일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내 중도층 인사들도 인 위원장의 청산안을 지지하고 있어 친박핵심들의 행보가 주목된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전북도 호남상생사업

나이 많을수록 부정평가 높아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가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제가동해 추진 중인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 등 호남상생사업에 대해 응답자 56.3%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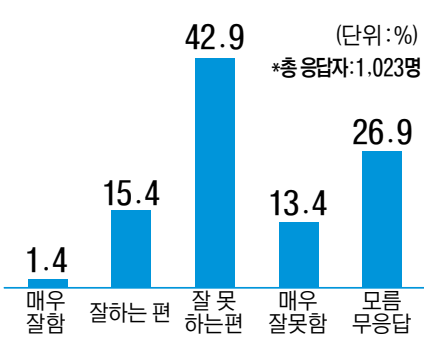
‘민선 6기 들어 3개 광역시·도가 전라도 1천년 기념사업·관광활성화·경제협력·기반확충시설 등 상생사업을 공동추진 중인데,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 42.9%는 ‘잘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달했다.

반면 ‘잘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각각 15.4%·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60.6%(매우 잘못+잘못)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주 54.8% ▲전남 53.4%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개혁보수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73.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정당(65.6%)·국민의당(63.1%)·새누리당(57.3%)·정의당(57.2%)·더불어민주당(56.4%) 등의 순이었다.

상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7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세 이상(62.3%)·40세~49세(55.6%)·30세~39세(49.1%)·19세~29세(37.2%) 등이다.

■ 호남 상생사업 평가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및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 등 지역현안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앞으로 3개 시·도는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전라도 천년정사편찬, 전라 밀레니엄 파크 조성, 정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등 11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lee@

침묵 깬 박대통령 추가 간담회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침묵을 지키다가 전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데 이어 추후에도 언론 간담회 등을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 차원에서 대통령 목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처럼 돼 버린 데 대해 본인의 목소리로 진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시작과 특별검사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의 포석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심이반도 여전한 상황에서 박 대

靑 “본인 목소리로 진실 전달” 野 “후안무치도 정도껏” 비판

통령의 입장 표명이 오히려 ‘촛불 민심’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초·중·고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온 국민의 오장육부를 뒤엎어 놓았다”고 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다낭 · 캄보디아

문의: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 062)228-1199

캐주얼

ARPF01

초특가 필수기

앙코르왓 4일, 5일

5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1일 ~ 1월 14일 매주 수/토

스카이앙코르항공 (ZA항공)

특식4회(샤브샤브, 김치찌, 버섯김치전골, 쌈밥정식)

캐주얼

AVPF13

[4성급 호텔] 투본강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8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0일 ~ 1월 17일 (출발일 상이)

비엠펙항공 (VJ항공)

호이안 투본강 투어(\$30상당), 스넥바구니(\$10상당) 포함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인생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벤] 시장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패키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창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